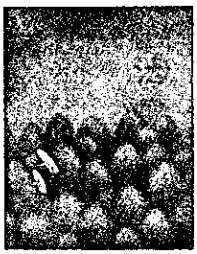
참여사회 1995년 9·10월호



표지 일러스트레이터 · 이인수
시민법률운동으로서 공익소송.
법을 통한 사회제도 개혁이라는
그 비전을 담아봤다.

발행인 김중배

편집인 김민환

편집자문위원 김대환 박연철 박원순
박은정 박호성 안경환
안영도 양길승 이삼열
조희연 조홍식

편집위원회 김동춘 류기남 손혁제
이대훈 이주향 이지현
정철영 조대희 한인섭

편집주간 김호기

편집부주간 안영배

홍보실장 권순옥

편집부장 권영준

기자 장윤선

해외통신원 이승희(미국워싱턴)
차미경(홍콩)
이두원(캐나다 뱅쿠버)

디자인 서인커뮤니케이션즈
인쇄 오름시스템
총판 한울출판사(전화: 326-0095)

참여사회 1995년 9·10월호 통권 제3호

Copyright © 참여연대

값 3,000원

1995년 6월 17일 등록 마 2331
1995년 9월 1일 발행(격월간)
발행처: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우140-012)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통신ID(하이텔/천리안): SOPA21

PSP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m 401, Kiwon Bldg, 404
Han-gang-ro 2-ka Yongsan-gu
Seoul 140-012, Korea.
Tel:822-796-8364
Fax:822-793-4745
Hitel/PC serve ID: SOPA21

목차

특집 I 공익소송과 시민운동

현대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현대형 소송의 형태로서 '공익소송'은 대두됐다. 이런 공익소송은 법을 통해 잘못된 정책이나 사회제도를 바꾼다는 면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커다란 힘을 실어나가는 공익소송, 그에 대한 연구와 외국 및 우리의 사례를 살펴본다.

18 김중배칼럼/**화폐의 환율과 삶의 '환율'** 김중배

20 시사칼럼/ **'냄비'가 아닌 '무쇠솥'의 철학** 박원순

22 남북통일 전망과 분석·**1995 평화와 통일의 희년 선언** 이삼열

28 남북통일 전망과 분석·**"민간통일운동이 남북대화 이끌어낸다"** 김창수

33 **특집 I / 공익소송과 시민운동**

34 **법을 통해 사회를 바꾼다** 김미화

37 사례1 · **일본의 공해 · 환경 판례** 경수근

38 사례2 · **미국의 공익법운동** 황승흠

40 사례3 · **우리나라 공익소송** 편집부

41 **좌담 – 우리 사회 공익소송의 역할**
안영도 · 송기영 · 이은영 · 이찬진

46 우리시대의 담론/**세계화론** 김호기

50 현지보고/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한국기업 가장 싫어한다"** 김은영

56 참여아카데미/**21세기는 '민간안보'가 문제다** 인권센터

59 발언대/**주소를 잃은 한 소설가의 편지** 한천석

63 **특집 II / 정치개혁과 시민운동**

64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신중해야"** 황주석

70 **"시민운동, 정치참여에 나서야"** 유종성

74 **독일 녹색당으로부터 배운다** 윤도현

77 정국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의 모색 의정감시센터
-정당 및 시민 · 사회단체 대토론회

특집 Ⅱ 정치개혁과 시민운동

'정치개혁'을 주창하는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이를 놓고 시민운동진영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운동의 정치실험, 그 첨예한 논의들을 싣는다.

남북통일 전망과 분석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 맞물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 쌀회담 등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하면, 그것은 또 어떤 돌발적 변수에 의해 반전될 지도 모르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세다.
그런 가운데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도 더욱 활성화돼고 있다. 현단계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과 통일논의들을 진단한다.

참여연대 25시

최근에 있었던 참여연대 주요 활동과 각 센터 및 위원회 소식들.

83 법이야기/**성(性)의 프리즘을 통해본 법언어** 박은정

86 긴급기획/**5·18관련 특별법 전문** 민교협 · 공익소송센터

92 생각하는 글/**여론조사 바로 읽기** 홍형식

94 해외시민단체/**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자료센터(PARC)** 장소영
일본 ATJ와 필리핀의 민간연대 강소영

98 시민단체가 띄우는 통신/**"시프린스호 피해보상, 정부가 나서야"** 박계성

100 참여칼럼/**너와 내가 '우리'로 함께 가자** 권순옥

103 **참여연대 25시**

112 문화읽기/**멀티미디어와 정보화사회**
-가까운 환상, 먼 현실 이주향

116 시민사회와 정보운동/ **시민운동가를 위한 인터넷** 고한석
-자율에 기반한 연대, 인터넷의 세계로 가자!

120 영화이야기/**권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제3영화'** 정성일

122 서평/**진보의 제 길 찾기**
-『시민사회의 철학』 외 2권 선종효

6 1995년 자화상/못 다 부른 통일 노래
실속 아쉬운 동네 문화잔치

14 실천하는 사람들/마쓰이 야요리
에디시오 들라 토레

32 주완수 만평

62 손혁재 시사꽁트

102 통계로 본 환경운동

124 독자마당

"한국의 시민운동, 세계로 눈 돌릴 때"

글/오재식
참여연대 공동대표이다.

지난 7월 25일 한국사회교육원에서는 '시민운동과 아시아연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한 일본의 마쓰이 야요리 씨. 언론인이며 사회운동가인 그녀에게 일본 시민운동과 북경 여성대회 등 아시아 여성운동, 그리고 한국의 시민운동과 아시아운동과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동경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전공
「아사히(朝日)」 신문사 북경, 동경, 싱가포르 특파원
「아사히(朝日)」 신문사 편집위원 역임
현재 아시아 일본여성연구소 소장, 북경여성대회 동북위원장
저서로는 「흑금을 울리는 아시아」 등 10여 권이 있음

"한국에는 강한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때때로 민족주의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화의 길을 가고
있으므로 한국의 시민운동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들리는
피해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운동에 있어 서구 유럽의 경우를 보면 시민운동과 정부가 일정 부분 협력을 해서 그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가령 일본의 여성단체들은 일본정부의 해외원조(ODA)를 감시하고 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ODA가 원조를 받는 쪽의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역에 집중원조를 해서 해산물과 농산물을 재배해 일본에 가져오는데, 현지 주민들은 이 일로 생업을 잃고 고향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원조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인도의 경우 잘 알려진 나르마다(Narmada)지역에 거대한 댐공사를 세계은행의 원조로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수십 만의 원주민이 쫓겨나게 되어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일본에서도 그 운동과 연대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일본 ODA의 출자분을 중지시켰습니다. 세계은행도 그 사업을 재고하게 되었고요. 아직은 아시아의 시민운동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민중에 서 있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북경 여성대회의 준비과정을 보아도 아시아의 여성운동은 서구 유럽의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어떻게 아시아운동과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고 경제발전단계도 달라서 연대가 힘듭니다. 한국경제는 일본의 뒤를 이어서 아시아 사람들을 착취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우선 국내에서 이런 관행을 견제,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실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만 아시아와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강한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때때로 민족주의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화의 길을 가고 있으므로 한국의 시민운동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들리는 피해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 여성의 80%가 아직도 문맹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문제와 연대를 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열정이 없이 국제회의에나 나오는 여성 엘리트들과 연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평생 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 고집(?)을 지탱해준 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저희 부모님은 모두 기독교 성직자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중에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학교와 동네에서 받은 차별의 경험이 깊이 남아 있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몹시 아파 4년 가까이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나를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유학한 적이 있는데 두 나라에서 모두 심한 인종차별을 체험했습니다. 일본『아사히(朝日)』신문에 입사해서 환경, 평화, 여성문제를 취재, '80년대 초에 아시아 지국(싱가포르)에 배속됐는데, 저는 그때 유일한 여성 특파원이었습니다. 그 일로 해서 아시아 각국을 발로 누볐고 각 층의 사람들, 특별히 불우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현장을 수없이 취재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의 불운과 불행이 일본, 아니 공업 선진국 여러 나라의 부귀와 연결돼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눈을 떴습니다. 아시아의 문제를 보도해야 하는 사람이 아시아의 문제를 안고 싸우는 운동에 뛰어든 것입니다."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이해해야"

글/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이다.

지난 7월 초 참여연대에서는 '21세기 사회발전과 연대' 워크숍을 가진 바 있다. 이 워크숍을 공동으로 준비했던 필리핀 대중민주주의연구소장 에디시오 들라 토레 씨. 그는 가톨릭사제로서 또한 사회운동가로서 필리핀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서 30여 년간을 일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필리핀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사람과 사람, 사회운동과 사회운동을 연결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만큼 그의 관심사는 민주화, 사회발전, 시민사회, 신학 등 넓고 다양하다. 한국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를 만났다.

신학자이며 카톨릭교회 사제, 교육자
현 대중민주주의연구소장

– 민주화운동이 활발했던 필리핀과 한국의 시민 · 사회운동은 '90년대에 들어와 과제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본질적인 민주화는 매우 더디 진행되고 있고 사회운동의 역할은 오히려 축소되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이럴 때 시민운동 · 사회운동이 지켜야 할 전통과 또 혁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무엇보다 민주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은, 법적 정통성을 가진 보수정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민주화할 것인가라는 과제로 보아야 합니다. 권력자들에 대해서 정책논쟁, 대화, 협상, 설득을 모두 해내는 사회운동이 성숙한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비정당적이고 비정부적인 영역에까지 민주적인 사회관계를 창조해내는 것이 민주화운동에 속합니다. 두번째 과제는 대안의 발전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적 개발프로젝트라고 해도 좋겠지요. 민주정부 이후에도 환경, 경제, 사회, 인권, 시장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발전전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야 말로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90년대 시민·사회운동의 세번째 과제는 한 나라의 민족적 관심사를 넘나드는 지역, 민족, 국제의 유기적인 연관성입니다.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수준을 한꺼번에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민의 힘과 참여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유연한 연대성의 정치를 구사할 과제가 있습니다."

–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시민사회론은 장점도 있지만 전통적인 기층민중운동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필리핀 시민 · 사회운동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면서 수용되기 시작했지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는 영어의 개념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타갈로그(필리핀어)로는 번역할 수 없습니다. 한자로도 '도시사람의 사회'라는 어색한 말이 되지요. 그러나 이제는 강력한 말이 되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를 거론할 때 그람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염두에 둔)의 의미로 쓰지만 최근 그렇게 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미국식 로비활동이라던가 토크빌의 의미로 쓰지요. 또 국가는 권력이고, 시장은 이윤이다 하면서 그 반대개념으로서 '무언가 유토피아적인' 시민사회를 설정하고 온갖 기대치를 쏟아붇는 경향도 있지요. 그러나 시민사회개념은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폭 넓고 유연한 민의 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 이상 부담을 주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80년대말 사회운동의 분화과정에서 '시민'이 '민중'을 누르고 등장했기 때문에 (웃음) 논의가 더 복잡한 것으로 압니다. 진보운동은 지금까지 '민중'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해온 데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유용한 출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테면 민과 공동체는 국가나 시장을 전제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일차적인 실체인 반면에,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속되어 있지요.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 한때 가톨릭교회의 사제이시기도 했습니다만, 사회운동에 참여한 개인적인 동기가 특별히 무엇인지요? 또 최근에 특별한 관심사가 있다면?

"처음에는 그냥 독창적인 신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농민지도자들의 피정을 담당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이때 가난한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이들의 삶과 필리핀의 농민문제에 뛰어드는 게 가장 좋은 신학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정의가 기술발전보다 중요한 것이었고 개발보다 평등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됐지요. 평등과 지속성, 자연과의 조화, 그런 농촌발전이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관이 됐습니다. 내가 불러들인 대학생들이 농촌활동을 끝낸 다음 수많은 질문을 나에게 던질 때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리는 내 모습은 교육자 또는 사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 혁명가가 이제 시민사회운동가로 변했다고도 하지만 이는 우스운 말입니다. 지금도 농민들의 삶처럼 포용성 있는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조와 영성(靈性)의 관점을 사회운동의 비전과 결합시키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공동체, 연대(solidarity)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행위는 '진실'을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환율과 삶의 '환율'

김 중 배

언론인이며, 참여연대 공동대표 겸 본지 발행인이다.

어줍은대로 '비교문화'라는 생소한 동네의 연구원 노릇을 했던 경력 탓인지도 모른다. 화폐가 아닌, 다른 가치들의 비교라는 맥락에서, '환율'이라는 낱말이 자꾸만 머리에 못박혀드는 작금이다.

낱말의 지배는, 지배의 속성을 갖기는 마찬가지인가. 한 번 휘어잡고 나면 좀처럼 해방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그 때문일 터이다. 요즈음 나는 이 자리 저 자리에서 심상치 않은 제멋대로의 '환율론'을 떠벌리고 다닌다. '재방송'을 들어야 하는 이들에겐 한없이 송구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이 병처럼 떠벌려댄다.

당연히 동기가 없을 턱은 없다. 가령 엔화의 환율이 치솟던 무렵에도, 침략마저 부인하는 목소리들로 말미암아, 일본이 갖는 정의의 '환율'은 바닥 장세를 헤매는 것으로만 믿었다. 오히려 엔화의 환율이 떨어져가면서, 무라야마 총리가 내놓은 반성과 사죄의 성명은 그 나름대로 저들이 갖는 정의의 '환율'을 조금은 높여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가.

그러나 더욱 절박한 동기는 밖이 아닌 우리의 안쪽에서 타올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바다 밖을 향해서는 곧잘 정의의 삿대질을 퍼부어대면서도, 이 땅의 권력은 스스로 정의의 회생을 억누른다. 스스로 부정의의 확산에 가세한다.

그 표본이 바로 12·12와 5·18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다. 심지어 이 땅의 권력은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폭언'마저 서슴지 않는다. "우리의 학생들에게 그렇게는 가르칠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함성도 모기소리로 치부된다. 역시 나라마다 다른 정의의 '환율', 언론의 '환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땅의 권력은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폭언'마저 서슴지 않는다. "우리의 학생들에게 그렇게는 가르칠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함성도 모기소리로 치부된다."

참담하게도 정의와 언론의 '환율'이 바닥 장세임을 거듭 확인케 하는 사태들은 끝없이 이어진다. 거의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5·18 불기소에 항의하던 우리의 아들은 경찰의 최루탄에 눈을 잃는다. 카메라를 들이대던 기자들은 구둣발 아래 짓밟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어떤 거대언론은, 경찰의 부상만을 태연히 강조한다. 정의와 언론의 '환율'과 함께 민주주의의 '환율'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풍경들이다.

8·15의 사면에도 '사기'라는 삿대질이 빗발친다. 사실 양심수의 사면은 '끼워넣기'에 불과하다. '구색맞춤'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형 부패의 주범들이 사면의 주류다. 오죽하면 현직의 검사마저 사면의 부정의에 항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가. 그나마 그의 항변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역사의 희망이라면 희망이다. '법의 지배'에도 '환율'은 있게 마련인가.

무참할 수밖에 없는 '환율'의 발상은, 민망함도 외면한 채 줄줄이 이어진다. 발상이 짓궂어서가 아니라, 사태가 발상을 부추기는 것이다. 경기 여자기술학원에서는 서른 일곱이나 되는 우리의 꽃다운 딸들이 숨져갔다.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떼죽음이다. 인명의 '환율', 삶과 죽음의 '환율'이 어쩔 수 없이 떠오른다. 뼈저림 속에서 떠오른다.

반환점에 들어섰다는 김영삼 정권 아래서만 하더라도, 차마 눈을 뜰 수 없는 떼죽음은 이어진다. 구포 열차사고(78),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44), 서해 훼리호 침몰(292), 성수대교

> **"한 마디로 화폐의 환율 정도가 그나마 제값을 챙기고 있을 뿐, 다른 가치의 '환율'들은 총체적으로 바닥 장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총체적 부실'이란 비단 가시적 축조물에만 한정되는 낱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들뜬 어른들은 '선진국' 타령을 늘어놓는다. 참으로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저 자아내는 언술이다."**

붕괴(32), 충주호 유람선 화재(29), 아현동 가스 폭발(12),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101), 그리고 아직도 '500여 명'이라는 어림수만 헤아려지는 삼풍백화점 붕괴… 눈이 시려오는 탓으로 괄호 안에 묶어둘 수밖에 없는 죽음의 숫자들 앞에서 누군들 고개를 들 수 있는가. 인명의 '환율'을 떠올리는 뼈저린 발상에, 누군들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마침내 이번엔 경기 여자기술학원의 떼죽음이라고 한다. 그 떼죽음은 이 땅이 갖는 복지의 '환율'을 실감케 한다. 명색이 복지시설이라는 학원은, 살상 감금의 수용소였던 것이다. 그 감금의 창살로 말미암아 우리의 꽃다운 딸들은 죽음의 수렁으로 떨어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이 땅의 어른들이 감히 입에 올리는 복지의 실체다! 복지의 '환율'이다!

굳이 '마침내'라고 말하는 까닭은 자명하다. 그 하나는 소망의 '마침내'이다. 없어야 할 떼죽음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통한의 '마침내'이다. 없어야 할 떼죽음은 '마침내' 복지를 내건 학원의 마당에까지 덮쳐들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화폐의 환율 정도가 그나마 제값을 챙기고 있을 뿐, 다른 가치의 '환율'들은 총체적으로 바닥 장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총체적 부실'이란 비단 가시적 축조물에만 한정되는 낱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들뜬 어른들은 '선진국' 타령을 늘어놓는다. 참으로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저 자아내는 언술이다.

사회운동 또는 신사회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의 역량은 이제 그 착각과 환상의 파괴에 쏠려야 한다. 한 사회가 갖는 기능과 역할과 가치의 '환율'들을 똑바로 깨닫는 작업에서부터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설계와 새로운 건축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의 압력을 가중해야 한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나는 요즈음 사회학의 낡은 교과서를 뒤적여본다. 그 가운데서 매키버를 만나기도 한다. 그는 사회집단의 생활과정을 네 가닥으로 구분한다. '적응'과 '목표달성' 그리고 '통합'과 '잠재(Latency)'가 그것이다.

그의 문법을 따른다면, 자연과 인물의 '적응'이 옳지 않았으므로 삶의 '환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죽음의 '환율'이 높아진다. '목표'의 설정과 '달성'의 방법이 그릇되었으므로 대교와 백화점이 무너진다. 가스는 폭발하고 꽃다운 목숨들이 떨어져간다. 따라서 '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복지와 수용소의 혼란은 '통합'의 요원함을 반증하는 극치의 보기가 될 것도 같다.

'잠재'는 또 어떠한가. 매키버가 말하는 '잠재'란 가치규범의 창조이며 유지이다. '적응'과 '목표달성'과 '통합'을 지탱하는 바탕이 '잠재'인 셈이다. 오늘의 나에겐 이 땅의 '잠재'를 재어 볼 만한 기력이 없다. 그저 눈을 감고 싶을 따름이다.

매키버의 지표들은 운동의 지평과 지향을 일깨워주는 것도 같다. 그 지표들의 '환율'이 높아져야만 나라와 겨레의 '환율'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지표들을 삶의 현장에 연결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그 지표들을 제대로 가꾸어낼 때, 운동은 그야말로 산 운동이 될 터이다.참여

시사칼럼

'냄비'가 아닌 '무쇠솥'의 철학

박원순
변호사이며,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다.

얼마 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이어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법률상의 용어는 언제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외우기 어렵고 골치아픈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소시효'라는 용어는 '미필적 고의'와 함께 이제 그 예외가 돼버렸다. 법률용어가 이처럼 국민들 앞에 어지러이 난무하는 것은 그만큼 '법적 난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왕 내친김에 '공소시효' 제도를 좀더 알아보자.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검사가 기소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로서 "시간의 경과에 의한 가벌성의 감소, 증거의 산일 이외에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복합적 요소"를 열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현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중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15년만 숨어 지내면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게 된다.

'5·18 광주 학살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뒤로 그 결정의 위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중이다. 단순히 집단적인 학살사건이었다면 1980년 5월 18일부터 15년이 지난 1995년 5월 17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국헌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장악한 내란의 죄로 고발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국보위 설치 시기에 성립되는가 아니면 5공화국 취임시에 성립되는가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시기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 어느 쪽이든 간에 현 정부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한 이 나라 검찰이든 헌법재판소든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을 기소 또 기소촉구를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현 정부는 이 '쿠데타적 사건'들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으로 오래 전에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현행법 하에서 이들의 처벌은 '물 건너 간' 것이 되고 말았다.

> "'5·18 광주 학살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뒤로 그 결정의 위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중이다. 현 정부는 이 '쿠데타적 사건'들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으로 오래 전에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래의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 그 자체에도 반하는 것이다. 비록 1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가벌성이 감소됐다거나, 증거가 산일됐다거나,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살자들은 '도망자'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권력자'의 신분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다. 반대로 그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지난 세월 동안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이 부당한 현실은 가벌성을 경감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켜왔다. 검찰권은 그들의 손아귀 안에 있었으며 어느 검사도 이들을 기소할 '배짱'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한들 이들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다. 대다수 국민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

학살자들은 '도망자'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권력자' 의 신분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다.
이 부당한 현실은 가벌성을 경감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한들 이들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검찰이나 이 나라 정부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의 손목을 비틀어 공소장에 서명하게 하는 국민의 여론이며 행동이다.

”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검사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소시효 제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오해다. 공소시효는 인권의 보호와 법치주의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 살인을 비롯한 중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잔혹한 범죄를 일삼았던 나치 전범들에 대하여 영원히 안식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가들의 요구가 1960년대에 전 세계에 메아리쳤다.

1964년 6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법률가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통상적 범죄와는 그 법률적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반인도적 범죄임을 지적하는 바다. 국제법의 원리는 그와 같은 범죄를 재판소에 언제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인류가 영원히 나치의 독재와 잔혹함이 재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된 이 같은 인류의 합법적인 소망에 따라 그 범죄의 기소와 처벌은 특정국가의 국내법의 관할에 포괄적으로 속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가들에게 부과된 국제적이고도 보편적인 의무로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유엔에서는 1968년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는 조약을 만들었고, 전 세계의 수십 개 국가가 이를 비준했다. 자신의 영내로 숨어들어온 나치 전범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캐나다는 1989년, 오스트레일리아는 1990년, 영국은 1991년 각각 전범 처벌법을 새로이 제정했다. 바로 어제의 일이다. 프랑스에는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효를 제거함으로써 독일 점령 하에서 나치에 부역한 '뚜비에르'를 지금도 재판하고 있다.

비엔나에서 '시몬 비센탈 다큐멘테이션 센터' 라는 곳이 있다. 이 거대한 문서보관소에는 나치 장교 수만 명에 대한 파일이 관리되고 있다. 이들의 범죄행위와 전후 행적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추적된다. 아이히만은 바로 이러한 추적 노력과 유태인 사설 체포대에 의해 체포, 송환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처형된 경우다. 이 사람들은 거의 아흔 고개를 넘었다. 센터의 관리자들은 금세기의 종막과 더불어 파일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를 창립한 시몬 비센탈은 어떤 책에서 "끝없는 추적이 좀 가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썼다. "복수가 아닌 단지 정의일 뿐"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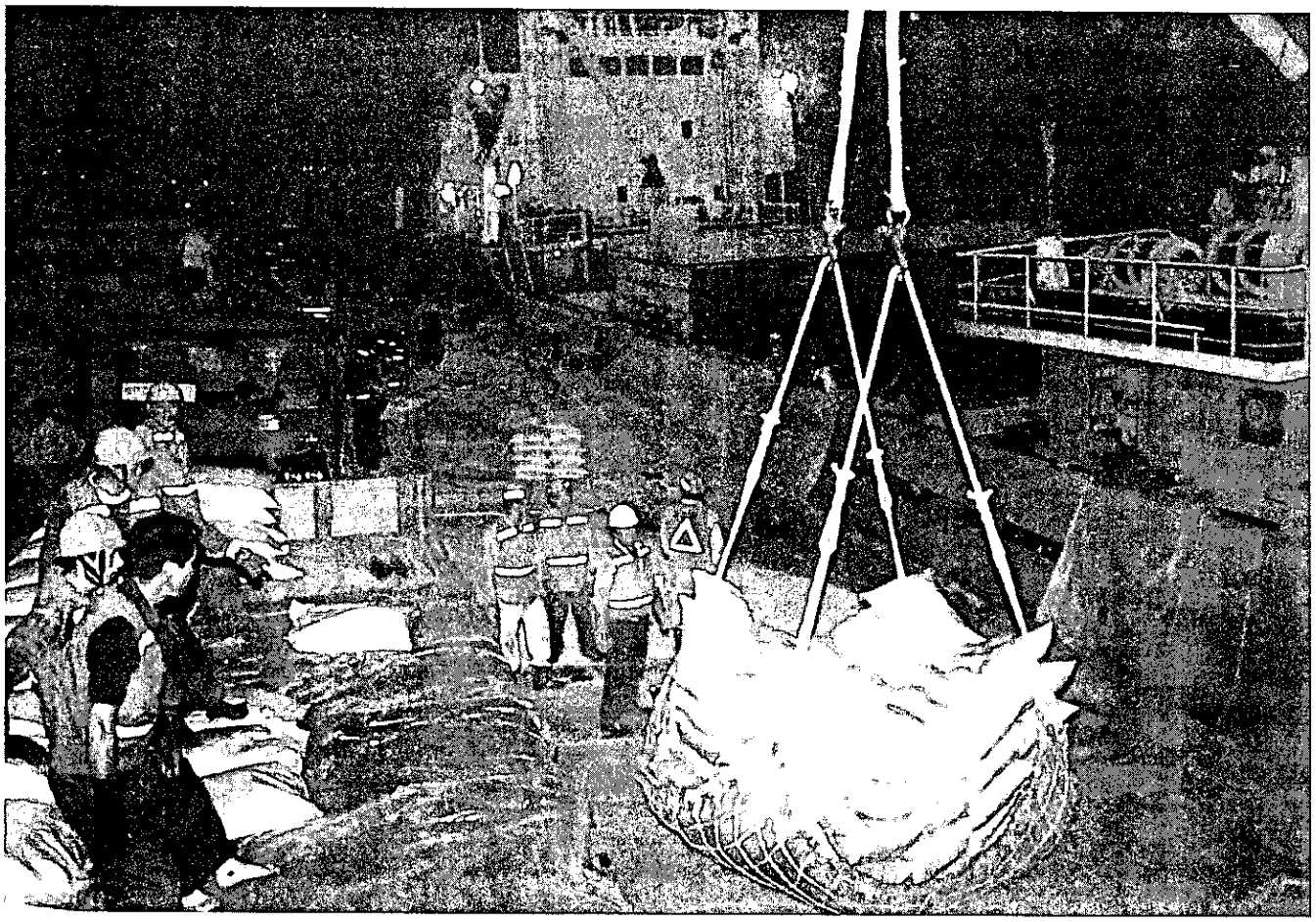
이와 같이, 문제는 검찰이나 이 나라 정부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의 손목을 비틀어 공소장에 서명하게 하는 국민의 여론이며 행동이다.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며 특별검사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과 행동에 돌입했다. 대한변협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법률적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프랑스의 『렉스프레시옹』이라는 잡지는 1964년 한 해에 2,000여 건, 그로부터 6년간에 걸쳐 5,000여 건의 나치 부역자들을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다. 주간지였던 이 잡지로서는 완전히 이들의 기사로 '도배질'을 한 셈이다. 이러한 집중 캠페인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배신한 비열한 부역자들을 형사처벌에 직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언론, 우리의 국민은 한 이슈에서 다른 이슈로 사흘이 멀다하고 좇아다닌다. 그러다보니 꼭같은 사건이 또 터지고 만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냄비'가 아닌 '무쇠솥'에서 충분히 끓이고 달여 사회적 쟁점을 완전히 해소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1995 평화와 통일의 희년 선언

이삼열
숭실대 철학 교수이며,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지난 1988년 제37차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채택하고, 해방과 분단 50주년이 되는 올해를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 선언은 분단을 구조악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바로 분단의 극복이 악에서의 구원이라는 뜻에서, 신앙의 문제요 선교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 선언은 통일운동의 다섯 가지 원칙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정책적 건의들을 내놓아 남과 북의 정부와 민간 통일운동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당국에 대한 정책 건의와 함께 교회의 책임과 과제도 새롭게 인식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5년 2월 20일 서울 창천교회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44차 총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의 희년인 1995년 8월 15일에 채택 발표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1995년 희년 선언 작업반'을 구성, 여러 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강독회를 통해 「1995 평화와 통일 희년 선언」을 내놓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해 싣는다.

지난 6월 21일, 국적선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시아펙스호'가 북한에 제공할 쌀을 선적하고 있다.



동서 냉전의 해소와 남북의 화해

남과 북의 기독교가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한 1988년 이래, 국제 정세와 국내의 통일환경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유럽의 평화운동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미·소의 전략핵무기 감축 등으로 진척된 탈냉전과 동서의 접근은 마침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세기적 사건을 일으켰으며, 동구공산권이 붕괴하면서 동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세계사적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에는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동·서 독일이 분단 45년을 청산하고 통일되었고, 남·북 예멘이 분단 23년을 마감하고 통일을 이루었다.

냉전체제의 해소라는 세계적 변화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도 따뜻한 바람을 일으켰으며, 소련과 중국, 몽고, 베트남과 북방외교를 진전시켰고, 드디어 북조선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기독교의 1988년 통일선언으로 물꼬가 트인 민간통일운동과 통일논의는 훨씬 더 활발해졌으며, 6공화국 정부는 그해 7월 7일 대결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조선을 통일과 번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며, 민족간의 화해와 교류를 추구하겠다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냉전체제의 해소라는 세계적 변화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도 따뜻한 바람을 일으켰으며, 소련과 중국, 몽고, 베트남과 북방외교를 진전시켰고, 드디어 북조선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7·7선언 이후에 개선되고 완화된 정세는 남북대화를 재개시켰을 뿐 아니라, 예술단, 축구단, 고향방문단의 교류를 추진하게 하였으며, 민족의 화해와 남북교류, 평화통일에 관한 무성한 논의를 각계에서 불러일으켰다. 1988년 9월에는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으로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남북연합, 통일민주공화국의 세 단계를 거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북한방문 요구와 남북교류에 대한 각계의 폭발적인 요청과 주장들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1990. 8)을 제정케 하였으며, 정부의 창구단일화 주장과 법률적 통제가 강화되자,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등이 북조선을 방문하고 돌아와 형벌을 감수하는 신선한 충격도 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부의 북방정책은 좋은 성과를 거두어 소련과의 수교(1990. 9), 중국과의 수교(1992. 8)를 맺었으며, 1991년 9월에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결실을 보았다. 특히 1990년 9월부터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교류증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회합하였다. 마침내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라는 역사적인 문서가 조인되었으며 또한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제조와 배치 사용을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서명 발표되었다.

실로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 협력과 공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초석이 되는 획기적 문서이며, 민족의 평화통일에 한 이정표를 세운 중대한 기록이었다. 우리는 이 합의서가 1988년 통일선언이 제의한 원칙과 정책들을 대부분 수용하고 더욱 구체화하였음을 기뻐하며, 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믿고 희년을 향한 전진의 발걸음이 이루어진 데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합의문이 남북간에 서명되고 3년이나 지났건만, 아직 우리에게 화해와 협력의 시대는 오지 않고 있으며, 남북 합의서는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 남북 양측은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고 비방 중상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더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며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겠다"는 조항도 지키지 않고 있고,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나 경제·사회·문화 교류"에 관한 조항들을 만들어놓고도 아직 추진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역사적 합의문이 다시금 7·4 공동성명처럼 휴지장이 되고 무효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남과 북은 화해와 신뢰 구축을 말로만 선언했을 뿐, 진심으로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그래서 평화협정이나 군비축소 대신 군사훈련과 군비강화를 도모했고,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대신 '북핵제재론'이나 '서울불바다론'으로 맞서다 한(조선)반도를 다시금 동족살상과 파멸의 전쟁터로 만들 뻔한 위기와 긴장 속에 몰아넣었다.

다행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남북 정상회담의 길이 열리고, 전쟁 위기 국면은 벗어나게 되었으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과 조문파동 등으로 남북대화는 또다시 단절되고 냉전상태로 돌아서게 되었다. 북미회담과 경수로 협상과정에서도 남과 북은 대화거절과 따돌림으로 일관해 결국 불신의 벽만 두터워지고 말았다.

우리의 해방 50주년, 즉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경축해야 할 1995년 8월 15일에 남북이 뜻을 모아 전 민족적인 경축행사와 만남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분단의 상처와 골이 깊게 파여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화해와 신뢰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민족의 현실을 실로 가슴 아프게 여긴다.

신뢰 형성과 평화체제 실현의 길

우리는 좋은 합의문과 선언문이 만들어지고도 실천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악화되는 근본 원인이 아직도 남북 상호간에 기초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신뢰 부재의 가장 큰 이유는 합의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북의 국내 정치, 즉 대북, 대남 정책이 일치하지 못하고 모순되어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양측은 서로 자기의 태도를 바꾸기 전에 상대방이 변하지 않았음을 먼저 탓한다. 북쪽이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남쪽도 대북정책을 바꾸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남쪽이 흡수통일을 하려 하니 북쪽에서도 대남 봉쇄와 경계를 늦추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악순환의 논리다. 남과 북은 이러한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며, 상대방이 합의문을 실천하기 전에는 나도 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상호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남북은 이제 이 잘못된 상호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내 편에서 먼저 실천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천을 유도해내는, 일방적, 선제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우선적인 입장은 남북 양쪽에서 국가안보를 모르는 위험한 모험주의로 거부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 양측은 자기쪽이 상대방보다 군사적으로 열세라고 생각하며, 침략과 정복을 당하지 않을 안전장치나 평화의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남북이 진정한 화해와 신뢰를 이루고, 평화적 공존과 교류, 협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사이에 이러한 불신과 체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된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독일통일의 기초가 된 동서독의 화해와 신뢰, 교류 협력이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을 통해 확실한 평화체제를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체제와 안보의 위협을 제거했을 때 실천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동서독은 전쟁을 치루지 않았지만, 남북한(조선)은 전쟁을 치뤘기 때문에 휴전협정 체제와 같은 불안한 상태로는 군축이나 개방, 교류, 협력을 과감히 실천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북조선은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구권의 해체와 변화로 우방과 시장을 잃어버렸으며, 교역의 감소로 원유와 식량, 생활필수품의 수급에 타격을 입고 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세계의 교역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며, 미국의 대북 수출입 제한은 그대로 살아 있다. 일본과 서방세계는 미국과 북조선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교역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북조선은 남북대결과 긴장으로 엄청난 군사비를 부담해야 하며, 남한이 군비를 줄이지 않는 한, 안보 때문에 군대와 무기를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남북의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길은, 남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조선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주고, 경제발전에 협력하며, 변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선린과 교역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믿는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안보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북조선이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이 함께 주변 강대국들과 평화와 우호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안보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북조선이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이 함께 주변 강대국들과 평화와 우호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남북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신뢰를 형성하고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남북 양측의 정부가 특별히 취해야 할 정책과 조치들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이미 1988년의 상황에서도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과 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이 원칙과 정책들이 타당한 것이라 믿으며, 이들의 어김없는 실천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신뢰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 원칙들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자주의 원칙(민족 우선의 원칙)

남북 양측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성과 이익을 먼저 생각

하는 민족 우선의 원칙을 실천하고 견지해야 한다.

첫째, 남과 북은 냉전과 분단 시대의 동맹관계를 재검토하고, 남북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족자주적인 평화조약과 동북아 공동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민족의 자주성을 손상시키며 민족의 존엄과 권익에 어긋나는 한미 방위조약과 조소 군사조약 등이 조속히 개폐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전시작전권도 주한 미군에서 한국군에 이양되어야 하며, 미 주둔군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평화협정의 주체는 남북한(조선)이 되어야 하며, 미국과 중국 등 참전국들은 남북 당사자들의 협상과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지지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평화의 원칙(평화 우선의 원칙)

남북 양측은 분단국의 안보와 군사적 우위보다 남북의 공동안보와 민족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평화 우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휴전선의 비무장화와 단계적으로 군축을 협상하고, 일정과 계획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둘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합의와 허락 없이는 남북 쌍방은 어떠한 군비증강이나 신예 무기의 반입, 대규모 군사훈련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는 조속히 전 국토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한(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남북 양측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성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민족 우선의 원칙, 분단국의 안보와 군사적 우위보다 남북의 공동안보와 민족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평화 우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신뢰와 교류 우선의 원칙)

남북 양측은 단절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루기 위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남북의 교류와 방문, 통신과 회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와 화해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남과 북은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나 적으로 구정하여 신뢰와 화해에 장애가 되고 있는 모든 법률체계를 개폐하여야 하며, 남한의 국가보안법이나 이에 상응하는 북조산의 법률들이 조속히 개폐되어야 한다.

둘째, 각종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 교류법과 창구단일화 원칙 등이 현실에 맞게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의 상호신뢰와 화해,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는 비난이나 욕설을 중단해야 하며,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가 허위, 과장, 왜곡 보도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인도주의 원칙(인도 우선의 원칙)

남북 양측은 분단국의 이념이나 체제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 인도주의적 입장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남북 양측은 2촌 이내의 직계 이산가족(부부, 부모, 부자)의 재회와 재결합을 어떤 교류 협력보다 우선적으로 실현시키고 70세 이상 노인 가족들의 자유로운 방문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둘째, 분단과 전쟁 이후 남북 양쪽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속 억류되어 있는 모든 사상범과 장기수들을 석방하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송환해야 한다.

셋째, 납치된 어부들과 자의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모든 피납인사들을 석방, 송환해야 한다.

민주적 참여의 원칙(민중 우선의 원칙)

남북 양측은 통일논의와 통일방안의 결정과정에 민족의 전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다수이면서 소외되기 쉬운 민중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근로계층과 여성, 청소년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들도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민간통일운동의 자유로운 활동과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의 문서와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정확하고 진실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비무장지대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남북 민간인들이 회합할 수 있는 장소와 건물 시설을 마련하고, 각계 각층에서 다양하고 다원적인 통일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조선)반도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

남북의 화해와 협력 시대가 열리고 평화공존의 체제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민족분단의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와 민족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결코 통일의 희망과 노력을 포기하거나 늦추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평화롭고 협력적인 남북연합이나 연방제라 하더라도 민족의 분단이 영구적이어서는 안 된다. 분단체제로는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고, 또 민족의 꿈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원칙과 방향이 없는 무조건적인 통일을 조급히 서두르는 것도 민족의 삶과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동안 전쟁과 정복에 의해 급격히 이루어진 베트남의 통일이 많은 불행과 희생, 인권 유린을 가져온 것을 목격했고, 한 쪽의 붕괴와 다른 쪽의 흡수로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이 일방적인 지배와 식민지화를 가져와 많은 불평등과 부작용, 심리적 장벽과 갈등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미 1993년 4월에 베를린에서 열렸던 한독교회협의회를 통해 흡수통일의 후유증과 문제점들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으며, 여러 가지 충고와 교훈을 얻은 바 있다. 분단 50년의 비극과 고통을 치르고 이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로서 한국(조선)이 성취해야 할 통일은 다른 나라의 불행과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의 단점과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직한 통일의 길이나 조국의 미래상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기성품처럼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통일방안들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일 뿐이고, 토론과 협상을 위해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정세와 국내상황이 달라지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통일방안은 상황에 따른 국민적 논의와 민족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기독교적인 통일방안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향과 그 정신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도 논의해야 하며,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일이 민족의 삶과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윤리적, 사회선교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그 동안의 역사적 체험과 교훈을 토대로 한(조선)반도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민족의 통일과 미래에 관해 여러 가지 반성과 논의를 해왔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연구와 구체적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우선 민족통일이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희년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함께 사는 통일 [共生的 統一]

통일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가 되는 과정에 어느 한 쪽이 희생되거나 고통을 당하는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양쪽이 같이 이기며 같이 사는 공생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통일들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한 쪽이 다른 쪽을 정복하고 지배하였으며, 식민지로 만드는 통일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통일들은 양쪽을 함께 살리는 통일이 아니었으며, 통일 후에도 그 민족의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통일은 양쪽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어야 하며, 양쪽을 서로 살리는 상생(相生)의 통일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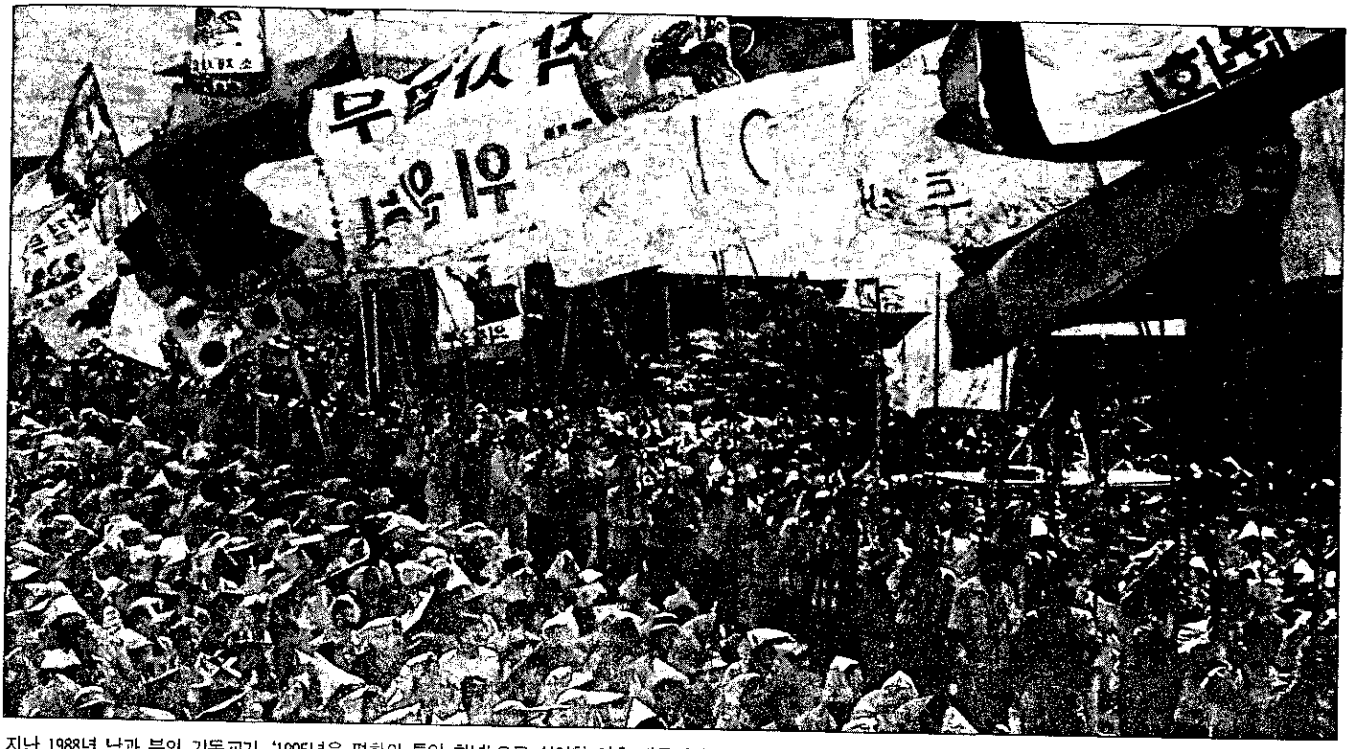
원래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는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을 추구하려는 사상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계약을 맺으며 이룩하려 했던 공동체도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노예, 그리고 여러 지파와 종족들이 함께 살도록 하는 공생의 원리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였다.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마태 5:45)과, "착한 아들과 방탕한 아들을 함께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누가 15:20)을 강조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모두 함께 사는 공생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이러한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실현해갈 통일의 과정과 단계에서, 그것이 체제의 연합이든 연방국가이든, 결코 어느 한 쪽이 지배자로 군림하거나 다른 한 쪽이 열등국민으로, 식민지로, 죄인으로 추락하는 통일이 되지 않도록, 공생의 원칙과 구조를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서로 배우며 닮는 통일 [收斂的 統一]

남과 북은 5천년 동안 한 핏줄을 나누며 같은 언어, 습관, 문화를 지녀온 한겨레이며, 겨우 50년 동안 분단되어 다른 제도와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념과 체제가 달라 생활방식, 사고방식, 가치관이 이질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에 비한다면 이질적 요소는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사상과 제도가 다른데 어떻게 통일해서 함께 사느냐는 걱정이 많으나, 이 차이는 서로 배우며 장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극복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 세상의 모든 제도와 이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와 이념에서 배우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도 이미 19세기로부터 서로 배우며 수렴해왔고, 남에게서 배우며 발전하지 않는 폐쇄적인 제도나 이데올로기들은 소멸되고 말았다. 비록 남과 북은 이제까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와 평등, 개방성과 주체성을 이분법적으로



지난 1988년 남과 북의 기독교가 '1995년을 평화와 통일 희년'으로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민간통일운동과 통일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왔다.

나누어 대결해왔으나, 이제는 민족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양자의 장점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며, 단점은 지양하고 극복해서 서로를 비슷하게 만드는 수렴적인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서로의 강점을 존중해주고, 약점을 보완해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의 눈 속의 티는 보면서 재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마태 7:3)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며,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주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받아들이듯"(로마 15:1-7) 서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와 신령한 선물을 받고 있다"(로마 12:6)는 점도 철저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계통이 다른 생물들도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오래 함께 살면 점차 비슷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며, 다른 제도와 사상, 문화도 삶의 양식과 틀이 비슷해지면, 즉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지면, 서로 닮아간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발전, 개방적 세계화와 북조선의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민족적 주체사상이 서로 영향과 가르침을 주고 받으며, 교류와 대화를 통해 배우며 닮아간다면, 다른 민족이 이루어내지 못한 발전적이며 수렴적인 통일을 우리 민족이 이루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롭게 만드는 통일 [創造的 統一]

우리의 통일은 단순히 갈라졌던 남과 북을 재결합시켜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가치와 문화, 새로운 사회구조와 공동체를 창출해내는 창조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 50년 전 분단 이전의 조국은 비록 하나였으나,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도, 자유와 민주도, 정의나 평화도 없었던 비참한 조국이었다. 이제 분단 50년의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희년의 정신으로 통일될 조국은 모든 면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조국이어야 한다.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것을 폐하시며,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정신(에베소 2:14-16)과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선하고 완전한 것을 분별해내는 태도"(로마 12:2)가 새롭게 만드는 통일의 정신적 기초와 방향이 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남북 양측의 현행 제도와 구조 중, 어느 한 쪽의 것을 다른 쪽에 그대로 이행시키는 방식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이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통일이 아니기 때문일 뿐 아니라, 결코 조국을 새롭게 만드는 통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모두 현행의 사회체제가 가진 문제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하며, 민족과 민중의 삶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 체제와 구조를 수정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의 20세기는 핍박과 수난으로 점철되어 왔다. 우리의 통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지구촌에서 자존과 긍지를 갖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분단의 아픔이 민족의 새로운 힘을 창출하는 모태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1995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간통일운동이 남북대화 이끌어낸다"
-「1995 평화와 통일의 희년 선언」 분석을 중심으로

김창수
평화연구소 연구원이다.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도 더욱 활발해졌다. 얼마 전 기독교회협의회가 내놓은 「1995 평화와 통일 희년 선언」 내용을 분석,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의 객관적 통일정세와 예측가능한 전망을 싣는다.

1986년 정기국회에서 한 야당 국회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고 주장했다가 곧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분단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통일논의 자체가 금기시돼왔음을 잘 보여준 하나의 사례였다. 그 동안 통일논의는 남북대화뿐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조차도 그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통일을 위한 민간차원에서 남북의 공동 목표 설정'이 절실했다.

통일논의 활성화와 95년 통일 희년 선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의회)는 1988년 2월 29일 제37차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인도주의, 민(民)의 참여를 통일운동의 5대 원칙으로 채택한다. 이는 이후 1988년 11월 제2차 글리온 회의를 통해 남북 기독교가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해방 50년, 분단 50년인 올해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1일 나웅배 통일부총리의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남북한간 합의 사항 발표.

우리 민족은 분단 이후 통일에 대한 열망을 져버리지 않았다. 통일 열망을 표출하기 어려웠을 때는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을지언정 통일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80년대 중반 이후 때로는 소리높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 '조선은 하나다' 고 노래했고, 때로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라고 목놓아 외쳤다. 남북한 당국도 이러한 민(民)의 움직임을 받아 안아서 1992년 2월에는 역사적인 '남과 북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합의서' 를 발효시켰다. 민족의 가슴 깊숙이 간직된 통일 열망의 분출과 통일논의의 활성화, 그리고 '1995년 통일 희년' 이라는 남북의 공동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은 교회협의회의 노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통일운동은 남북 교회가 합의한 '1995년 통일 희년' 을 이어받아 1995년을 통일 원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켜왔다. 물론 객관적 정세나 통일운동의 역량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 없이 단순하게 해방 50주년을 '통일 희년' 이나 '통일 원년' 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았다. 비판의 핵심은 현실적인 조건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통일 문제를 신비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은 민의 뜻에 기초한 남북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인 결단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남과 북의 당국자 그리고 7,000만 민족이 통일을 추진하는 정치기구 수립에 합의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서만 분단시대를 종식시키고 통일시대의 역사적인 막이 오르는 것이다. 물론 그 이후 통일국가를 발전시키고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를 단일체제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즉 통일시대는 변화 발전하는 역사의 역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을 역동적인 역사발전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95년 통일 희년이 의미하는 것은 통일의 신비화도 아니고 통일의 완성도 아니다. 분단시대를 종식하고 통일시대 개막에 대비한 남북 통일운동 차원의 공동 목표 설정인 것뿐이다.

통일시대는 변화 발전하는 역사의 역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을 역동적인 역사발전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95년 통일 희년이 의미하는 것은 통일의 신비화도 아니고 통일의 완성도 아니다.

해방 50년이면서 분단 50년이기도 한 올해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양됐고, 이제 어느 누구도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통일은 우리 시대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과제다. 통일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역사 앞에서 시대적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정치세력이든지간에 정치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해서 청사진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야만 하는 시기인 것이다.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과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

1995년 8월 15일, 교회협의회가 발표한 「1995 평화와 통일의 희년 선언」(이하 「희년 선언」)에는 그 동안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기독교의 노력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신뢰와 평화 구축을 위한 5대 원칙,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3대 원칙, 희년 정신 실천을 위한 교회의 5대 과제 등이 제시되어 있다.

'남북한의 신뢰와 평화 구축을 위한 5대 원칙' 은 통일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50년 동안 적대적으로 대결해온 남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남북한은 통일로 가기 위한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무력을 감축하여, 분단의 잔재를 청산하고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분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통일의 전제조건이 실현된다면 남북한은 통일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3대 원칙' 은 통일시대로 진입해서 남북한이 결합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나 국가들이 결합하는 방식은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등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남북한에서도 통일의 방안으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국가의 결합수준과 권력의 배분 방식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협의회가 제시한 '3대 원칙' 은 함께 사는 통일(공생적 통일), 서로 배우며 닮는 통일(수렴적 통일), 새롭게 만드는 통일(창조적 통일)이다. 이는 그 동안의 논의가 남북 국가기구의 형식적 접근의 차원에서만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무엇을 지향하는 통일방안인가에 대한 내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대립하고 있는 남북의 두 체제 가운데 어느 한 체제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체제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갖고 있다.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다른 가운데서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 의 문제다. 두 체제 가운데 한 체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한 체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존하는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살펴볼 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통일은 민족

한미간의 불평등성을 야기시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탈냉전과 통일시대에 맞게 바꾸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사진은 팀스피리트 한미군사합동훈련.

이 생존과 번영보다는 파멸을 가져온다. 그렇다고 해서 두 체제가 지금과 같이 적대적으로 대결하는 것 역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한다. 공생적 통일, 수렴적 통일, 창조적 통일은 바로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의 걸림돌, 한미 방위조약과 평화협정 당사자

남북한의 신뢰와 평화 구축을 위한 5대 원칙은 자주의 원칙, 평화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 인도주의 원칙, 민주적 참여의 원칙이다. 이러한 5대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동북아 공동안보 협력체제 구축, 한미 방위조약과 조소 군사조약의 개폐, 남북 평화협정 체결, 휴전선의 비무장화와 단계적 군축, 신예무기 반입과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시, 국가보안법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법률 개폐, 교류협력의 활성화, 비방 중지, 이산가족 재회, 장기수와 피납인사 석방 및 송환, 민간통일운동 보장 등이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남북한 당국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한미 방위조약 개폐와 남북 평화협정 체결은 정부당국이나 통일운동진영에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조약을 조소 군사조약과 연동시켜서 개폐를 제시했지만, 현재 한미 양국의 정책은 한미 방위조약에 기초하여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관계가 혈맹관계로 불리워지는 법률적 군사적 기초가 바로 한미 방위조약이다. 한미 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른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규모나 수준, 부대이동, 작전참여, 훈련실시 등에 대해서 한국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가 없다. 미일 안보조약과 비교하면 이 조항의 불평등성은 분명해진다. 미일 안보조약은 "조약국은 조약의 실시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또 일본의 안전과 혹은 극동의 국제평화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였을 경우 언제나 한쪽 조약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교환각서에는 "일본의 안전과 극동의 평화안전 유지를 위해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일본 배치, 장비의 주요한 변경, 일본국 내의 시설과 구역의 기지화는 일본정부와 사전 협의한다"고 적혀 있다.

한미 방위조약이 이러한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상황에서 강요되는 안보논리 때문에 민간통일운동 차원에서는 한미 방위조약의 개폐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교회협의회의 희년 선언을 계기로 해서 그 동안 군사적인 차원에서 한미간의 불평등성을 야기시킨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탈냉전과 통일시대에 맞게 바꾸어나가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교회협의회가 평화협정의 주체로 남북한을 지목함으로써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5일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가 발표한 「남북 해외의 7,000만 동포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분명히 하지 않고 다만 "미국은 6·25 전쟁의 교전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이

며 또 현재까지 남쪽에 주한미군이라는 군사력을 유지시키고 있으므로 평화협정 체결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밝혀둡니다"고 하여 미국의 당사자 자격을 강조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체결 당사자 문제다. 북한은 '74년 이후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한은 평화협정 자체에 소극적이다가 최근에 와서야 남북 당사자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 역시 남북 당사자를 주장하고는 있으나, 지난 7월 26일 한국 기자들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한 쌍방이 그 평화과정에서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이 수행할, 서로가 받아들일수 있는 역할을 마련할 경우 이를 지원할 용의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즉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으로 통일운동진영에서는 대체로 남북한과 미국의 3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그러나 교회협의회가 자주의 원칙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동북아 공동안보 협력체제 구축, 한미 방위조약 개폐, 전시작전권 이양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경우,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평화협정의 이행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즉 불평등한 한미 방위조약이 존재하고 있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남한과 미국이 협정의 한 당사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객관적인 통일 정세는 '북미관계, 북일관계의 발전', '남북관계 냉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북미관계나 북일관계는 동북아 안보체제, 한미 방위협정, 작전지휘권, 평화협정, 군축 등에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인 정세로 내다본 통일 전망

교회협의회는 희년 선언에서 "희년은 구약성서에서도 선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희년의 법과 정신을 지키고 실천해야만 성위될 수 있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협의회의 희년 선언을 계기로 해방 50주년, 분단 50주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실천해야 할 희년의 법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다.

통일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가? 남북한의 두 체제가 완전히 통일되는 것만이 통일인가? 두 체제가 완전히 하나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회협의회의 희년 선언에서 밝힌 '남북한의 신뢰와 평화 구축을 위한 5대 원칙'이 실천된다면 그 다음 상태는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5대 원칙은 분단을 유지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실현된다면 통일시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통일된 상태에서 남북한의 국가기구가 결합하는 수준은 다양하게 변화 발전할 것이다.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에 따라 남북한이 어떠한 체제로 발전해갈 것인지를 모색하면서 통일국가는 강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은 5대 원칙을 실천하는 정치적 통일을 먼저 한 다음, 공존하는 방식의 통일국가를 거쳐서 체제통일을 모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신뢰와 평화 구축을 위한 5대 원칙의 실현정도'와 '공존하는 방식의 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남북한 체제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기준으로 해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북미대화, 남북대화,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로 표출된다.

현재 객관적인 통일 정세는 '북미관계, 북일관계의 발전', '남북관계 냉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한, 미국, 일본은 신국제질서의 수립과정에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미관계나 북일관계는 동북아 안보체제, 한미 방위협정, 작전지휘권, 평화협정, 군축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주변의 냉전질서를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통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북미대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대북한 개방전략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탈냉전과 긴장완화를 가져오고, 경제성장을 노리는 북한의 이익과 일치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체제사수를 위해 사상무장을 더욱 강화하는 북한과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 개방 능력과 북한의 체제사수 능력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성격을 결정할 것이다.

김일성 조문 파동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냉각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통일 정세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다. 남북 당국자 사이의 대화가 발전해야만 주변관계나 남북 사이의 평화와 신뢰문제, 통일방안 문제 등 통일을 위한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조문파동 이후 북한이 남한 당국을 기피하는 정도는 남한정부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인다.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간통일운동이 남북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남한의 민주주의 역량의 성장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발전시켜 화해와 신뢰구축의 조건들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통일 정세를 규정하는 것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태우야, 달그라.
너무 영려 달그라
우리 말이 방울소리 나게
뛰어주고 있잖나?!!
5·18 살인범
전·노 처단!!
아이고-
내는 아 그래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다
-!!!